

국내 학술단체 카르텔과 KCI등재 제도 악용 실태 -뉴스타파가 2021년 연속 보도했던<논문공장의 영업비밀>을 중심으로-

홍여진 / 뉴스타파 기자

지난해 뉴스타파는 학술단체들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논문투고대장'을 조작하는 실태를 보도했다. 학술단체들이 조작된 논문투고대장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해 KCI등재지로 인정 받고, 여기서 생산된 논문을 교수 채용과 박사 학위 취득에 활용한다는 내용이었다. 보도 내용은 토론문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취재결과를 종합해 일부 학술단체들이 KCI등재 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KCI등재학술지 평가 제도 악용해 가짜 실적 쌓는 학회, 교수들

***학술단체 신설->동료 교수, 신임교수, 석·박사 학위생 등 이용해 논문 양 축적->**
허술한 심사 혹은 부정판 심사->동료 학술단체의 인용 지수 품앗이
지원->KCI등재지 선정->석·박사 학위생 소논문 게재 창구, 학술지 운영진의 손쉬운
연구 실적 확보 창구-> 해당 연구업적을 교수 임용, 박사학위 취득, 교수 재임용 평가
등에 활용

뉴스타파가 보도한 학술단체는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들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곳이었다. 한 곳은 10년 가까이 등재 학술지를 발행했던 곳이고, 한 곳은 신생 학회였다. 하지만 두 학회는 운영진도 유사하고, 해당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는 연구자들의 출신 분포도 비슷했다.

경기대 교수들이 두 학회를 운영해 온 방식을 보면, 먼저 KCI로 인정받은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에서 신생학술지의 논문을 인용해주는 방식으로 신생학술지의 피인용지수를 높여준다. 이미 한 학회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살짝 바꿔 신생학회에도 게재하는 방식으로 학술지 논문투고율을 높인다. 연구재단 평가에 유리한 점수를 받도록 소위 선배 학회가 도와주는 것이다. 이같은 품앗이 방식으로 신생학술지도 KCI학술지로 업그레이드 되고, 교수들은 양쪽 학술지에 논문을 손쉽게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실적을 더 쉽게 쌓을 수 있었다.

아래의 사진은 두 개의 등재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1~8위까지 1명을 빼고는 모두 경기대 교수들이자, 학회 주요 운영진이었다. 아래 명단 중 1위와 6위를 차지한 두 명의 교수는 이들 학회에서 쌓은 연구실적으로 2021년, 전임교수로 임용됐다.

관광경영학회, 한국관광산업학회 논문 투고자 BEST 8

2011 ~ 2021
출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TMR
관광경영학회

한국관광산업학회
Korean Tourism Industry Research Association

1. 최00 교수	57편	경기대 교수
2. 김00 교수	31편	경기대 교수
3. 신00 교수	27편	경기대 교수
4. 이00 교수	26편	경기대 교수
5. 정00 교수	19편	경기대 출신
6. 이00 교수	18편	경기대 교수
최00 교수	18편	경기대 교수
김00 교수	18편	경기대 출신
7. 구00 박사	17편	세종대 출신
8. 이00 교수	16편	경기대 교수
이00 교수	16편	경기대 교수

교수들이 논문 투고 대장 자체를 조작했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논문의 내용에 있었다. 논문 투고대장 조작을 오랜 기간 묵인, 유지해왔던 학술단체 운영진들의 논문 역시 연구부정행위로 가득했다. 아래 사진은 위에 언급된 교수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검증한 결과다.

<p>최00 교수 관광경영학회 편집위원장, 관광산업학회 부회장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 11편</p>	<p>이△△ 교수 관광경영학회 10대 회장 데이터 조작 등 2편</p>
<p>최△△ 교수 관광경영학회 전 사무처장, 관광산업학회 편집위원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 4편</p>	<p>김00 교수 관광경영학회 9대 회장 중복게재 등 4편</p>
<p>이00 교수 관광경영학회 이사장 표절, 데이터 조작 등 5편</p>	<p>이□□ 교수 관광경영학회 이사 부당한 저자 표시 등 4편</p>

현재 뉴스타파에 보도에 나온 논문들에 대해선 경기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예비조사 거쳐 본조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위의 학술지를 등재 취소 처분했고, 추가로 실태점검을 통해 위 2개 학술지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논문게재율'조작에 가담한 다른 학술단체의 학술지 2개도 등재 취소 처분했다.

KCI등재학술지 평가 조작 실태...과연 두 곳만의 일일까?

뉴스타파는 위 보도 이후 추가로 관광분야 전체 등재 학술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일부 학회만의 문제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관광분야 등재학술지는 총 16종(2021년 기준)이다. 16종 중 이미 보도해 등재 취소가 된 2곳을 제외하고 14종의 논문투고대장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14종 중 7종에서 경기대 문제와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학회가 발행한 학술지의 논문투고대장에선 몇가지 패턴이 보였다. ▲특정학회간 품앗이(A학회 게재 논문을 B학회 게재 불가 논문으로 사용하거나, B학회 논문을 A학회가 게재불가 논문으로 사용) ▲논문 재활용(이미 수년 전 자신들의 학술지에 게재됐던 논문을 마치 새로 투고된 것처럼 속이는 방식) ▲유령 논문(전혀 투고된 적 없는 논문 명단을 투고대장에 기입)등을 확인했다.

평가 : 투고논문은 2021년에 투고된 논문(B)와 2021년 이전에 투고된 후 2021년에 게재된 논문(C)과 2021년에 투고된 후 2022년에 게재된 논문(D) 인제는 약정함
 예시 시트를 참고하여 작성바람

교연도	투고일자	논문명	투고자(주저자 기준)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 (추가 심사자가 있는 경우 열 추가 가능)				최종 게재 여부	정규/비정규 논문 여부	게재는 발행연
			소속	성	소속	직위	성명	심사결	소속	직위	성명	심사결	소속	직위	성명	심사결			
20XX	20XXXXXX	논문 A																20XX	
		논문 B																	

1차 투고당시 주저자(책임저자)의 소속기관 기준(한 사람만 기입)
 심사자의 소속기관 기준(예: 교수, 연구교수)
 여부 : 정규논문은 심사를 거친 논문으로 업적으로 인정되는 논문

▲KCI등재지 평가를 받기 위해 연구재단에 제출하는 논문투고대장 양식

이렇게 논문투고대장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학술지에서는 어김없이 논문심사도 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이런 사례 중에는 연구업적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학회장도 있었다. 본인이 오랜 기간 학회 임원진을 맡으면서, 같은 기간 여러 건의 논문을 게재했고, 그 업적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것이다.

또한 16종 학회의 임원진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요 멤버가 겹쳤다. 서로 다른 학회지만 사실상 특정 임원진들이 장악한 한 두개의 학회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해 새로운 영역의 학술단체를 개설한 게 아니라 연구업적을 다양한 창구에서 쌓기 위해 주요 학회 운영진들이 여러 개의 학회를 만든 모양새였다. 해당 내용은 추가 취재를 마무리 한 후 추후 보도할 예정이다.

물론 이 같은 사례가 전체 학술단체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관광분야 만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김건희 여사의 사례를 볼 때 그렇다. 블로그 글과 신문기사 등을 짜깁기 해 쓴, '멤버 Yuji'로 잘 알려진 김 여사의 논문 역시 KCI등재지에 게재된 것이었다.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의 학술지는 2001년 등재후보지로 인정됐고, 2006년부터 등재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학회가 어떻게 계속 등재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제대로 논문심사를 하고 있는지도 짚고 싶다. 그러나 '학술지 등재 제도 관리지침(2022.4)' 나오는 표를 보면, 평가 때마다 85점 이상을 득점해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술지 평가제도에는 허점이 많다.

- 우수등재학술지의 경우

득점	결과 적용	비고
90점 이상 득점인 경우 (90점 ~)	우수등재학술지 유지	이후 매 6년마다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90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90점 미만)	등재학술지로 하락	이후 매 6년마다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 등재학술지의 경우

득점	결과 적용	비고
85점 이상 득점인 경우 (85점 ~)	등재학술지 유지	이후 매 6년마다 등재학술지 재인증 실시
85점 미만 득점인 경우 (0점 ~ 85점 미만)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	이후 매년 등재후보학술지 계속평가 진행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국내 학술지는 5979종이 있고 이중 2547종이 등재학술지다. 217종이 등재후보 학술지다. 보통 대학에선 등재후보 학술지부터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등재후보지까지 포함해 2800종이 넘는 학술지의 실태는 어떨까.

한국연구재단은 등재학술지 제도의 윤리적 운영을 위해 매년 무작위로 10%를 선정해 실태점검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개인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다. 해당 학술단체가 동의해야지만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가 많은 학술단체가 실태점검 결과 공개에 동의할 리 없다.

앞선 뉴스타파의 취재도 시작은 내부 제보였다. 논문투고대장은 국회의 도움을 받아 확보했다. 즉 학술단체의 운영상황은 베일에 가려져 있고, 정보 접근이 어려워 일반 연구자들이 부정학술단체를 걸러내기도 쉽지 않다. 논문을 검증하는 것도 어렵다. 연구재단 사이트를 통해 과거보다는 많은 학회들이 논문을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학회나 유료사이트를 통해 논문을 공개하고 있는 곳이 많다.

아래는 2021년 등재학술지 실태점검결과 공개 요구에 대한 한국연구재단의 답변.

“학술지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의 경우, 비공개 세부기준 제7호(경영/영업비밀 등 관련정보)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관련 학회(학술지)의 정보공개 동의서” 없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깜깜이로 비공개하던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5월 [학술지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해 유형별로 부정 사례를 공개했다. 비실명이기는 하지만 실태점검 결과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논문게재율 조작(실제 투고되지 않은 논문을 투고된 것처럼 속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게재율 높임) ▲논문셀프심사(투고자가 자신의 논문을

심사) ▲심사위원 3인이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간에 심사 ▲논문의 초록과 내용의 불일치 ▲국문 논문을 심사하고는 영문 논문으로 게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위 사례들을 보면 KCI등재지 평가 기준에 맞춰 학술지 평가 서류를 조작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 약탈적 학술지, 가짜 학회도 큰 문제지만 연구재단 공인 등재학술지 운영에도 문제점이 많다는 뜻이다.

여러차례 등재 학술지 관련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수많은 대학의 석박사 연구자들이 학위 취득을 위해 소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하는데, 이것이 부실 학술단체의 연명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부실한 등재 학술지 연명에 동원되는 대학원생들

취재진이 만난 복수의 대학원생들은 순수하게 연구, 작성해서 투고한 논문보다 논문의 질은 낮더라도 학회 핵심 교수의 이름을 공동저자로 올렸을 때, 논문 통과율이 높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진 연구자들이 대학원을 졸업하는 과정에서 양적 업적을 쌓는 비법부터 터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학원생들이 부실학회, 영터리 학회의 실무진으로 동원돼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는 경우도 많다.

한국연구재단은 계속 KCI제도를 손보겠다는 입장이다. “2021년도부터 학술지평가는 기본방향으로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 비중을 최소화하고 ‘게재논문’ 중심의 질적평가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기조에 맞춰 학계의 의견수렴과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22년도 학술지평가에서 대표적인 양적 지표인 ‘논문게재율’ 점수를 하향 조정하였으며, 추후에도 학계 및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사전 행정예고 등을 통해 ‘논문게재율’ 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이 밝힌 개선책이 얼마나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할지 모르겠다. 다만 대학이 계속적으로 KCI공신력에 기대 자체 검증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대학부터 연구자들이 논문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을 바꾸고, 실제 업적으로 제출된 논문의 질도 검증해야 하지 않을까. 대학원에서도 학위 취득 과정에서 반드시 소논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학위 취득 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현장에서부터 바뀌어야 KCI등재학술지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도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관련기사>](#)

[논문공장의 영업비밀① 어느 학술단체의 '가짜 심사'와 '도둑 논문'](#)

[논문공장의 영업비밀② 표절, 조작, 부실 논문도 '패스'...KCI등재지의 민낯](#)